

도심 한복판 난동에 사망·살인까지...마약사범 15.5% 급증

늘어나는 마약범죄

마약에 의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약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최근에는 마약 추정 물질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까지 발생했다. 한국이 '마약 청정지대'라는 말은 옛말이 된 모습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40분께 대마초에 취해 이태원의 한 도로를 뛰어다니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붙잡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여성의 소지품에서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했다. 그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마약 사건이 단순 난동에 그치지 않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왔다. 20대 남성 손님 A씨는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희주점에서 술자리를 마

마약 취해 도로 뛰어다니던 20대 여성 검거
최근 강남에서 마약 추정 물질로 남녀 사망
약에 취한 외국인, 60대 행인 폭행해 살해
올해 마약 사범 증가...작년보다 15.5% 증가

친 뒤 오전 8시30분께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 2000여명분인 마약류 추정 물질 흰색 가루 64g이 발견돼 경찰은 그의 사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 추정 물질로 보고 있다. 그날 새벽 A씨와 동석했던 유희주점 종업원 B씨도 당일 사망했다. A씨가 마약이 섞인 술을 먹인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A씨와 술자리

이후 오히려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살인이나 강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사례도 있다. 지난 5월11일 서울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중국국적 남성 C씨가 지나가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C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에 취해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03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2626명에서 15.5%(407명) 늘어난 수치다. 올해 5월까지 총 검거 인원은 4700명에 달해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했다. 뉴스

“신속하게 배송된다” SNS ‘수두룩’...온라인 익숙한 젊은층 취약

1030마약 48.9%→51.2%→58.9%→63.2%
SNS, 가상자산 등 비대면 거래 활발해져
트위터 등 SNS에 은어 입력시 쉽게 검색
청소년 트위터 통해 의료용 마약류 구매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일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사범 중 10~30대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 우려를 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 구매 등이 성행하면서 마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SNS나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마약 판매 관련 글을 찾아볼 수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3033명 중 10~30대는 1918명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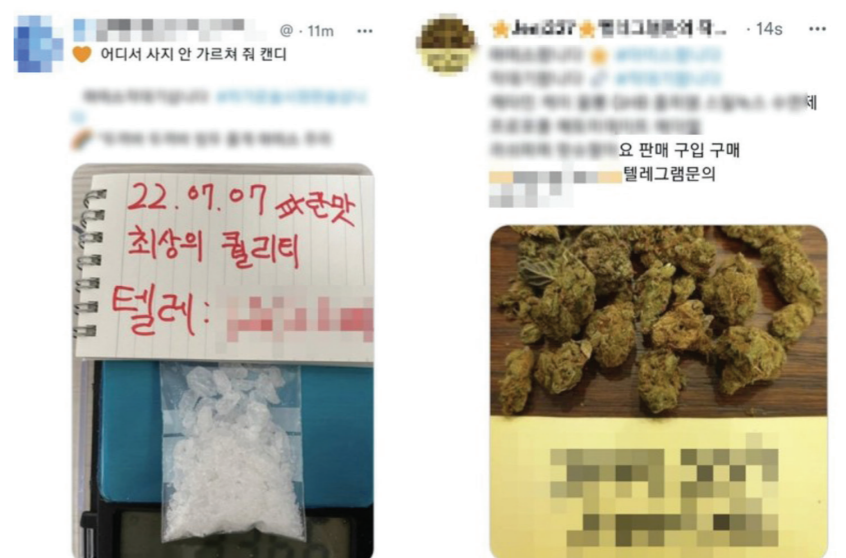
10~30대 마약사범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비중은 2019년 48.9%(5085명), 2020년 51.2%(6255명), 지난해 58.9%(6253명) 등으로 계속 상승했다.

마약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아진 주된 원인으로 유통 경로의 변화가 꼽힌다. 과거 마약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 암암리에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SNS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은 이전보다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트위터나 포털 사이트 등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정보를 담은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다수 판매자들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사진을 올려 “품질이 좋다”, “신속하게 배송된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아이디도 함께 올려두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이 거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인터넷 마약거래 사범은 1174명으로 전년 동기(892명)보다 31.6% 증가했다.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도 4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발표된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도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4년 전보다 278.2%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SNS나 웹사이트를 통해 마약 판매 광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디에타민,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다이어트 약물로 불법 처방 받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 마약 사범 가운데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가운데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트위터 캡처>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나비악)을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SNS로 유통시킨 판매자와 구매자 등 59명을 붙잡았는데 대다수의 구매자들이 의사 처방으로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청소년이었다.

“차단 위해 전방위 조치 필요...정부 기관 조율할 ‘마약청’ 만들어야”

마약범죄, 5월까지 4700명 검거...지난해 대비 20% ↑



국내 마약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도 유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마약의 특성상 유통 차단을 위해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국정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을 총 동원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마약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

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03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2626명에서 15.5%(407명) 늘어난 수치다. 검거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실제 마약에 손을 댄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5월까지 총 검거 인원은 4700명에 달해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했다.

국수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마약 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미 마약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추적 1차 교육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취급자에 대한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마약류가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관세청 등 국내 마약류 관계 기관과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로 마약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마약 유통 및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선 마약 국내 유통 차단과 범죄 수익 환수에 이르는 전방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엔(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주관 마약위원회(CND) 회의에 매년 참가 중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경찰 등 개별 조직이 수사한다고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량 생산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밀반입되는 국경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공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마약 범죄에 대한 1차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미리 입수된 첩보나 제보를 활용해 마약 조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잠입수사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상습적 마약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초범의 경우 치료에 초점을 맞춰 사회로 복원시키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각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